

[2016 기윤실포럼]

# 한국경제양극화 진단과 대안

- 일시 : 2016년 4월 1일(금) 오후 7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행사 순서

시간	프로그램	진행 및 강연자
오후 7:00-7:10	환영과 인사	<b>조흥식</b> 교수 (서울대 사회복지학, 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
7:10-7:40	발제 1	<b>한국경제발전과정을 통해 본 한국경제양극화 현상의 원인</b>  <b>백종국</b> 교수 (경상대 정치외교학과, 기윤실 공동대표)
7:40-8:10	발제 2	<b>한국사회 경제적 갈등과 불평등함정의 극복방안</b>  <b>윤덕룡</b> 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PI 부원장)
8:10-8:50	토론 및 질의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장 : 사회자</li> <li>■ 패널 : 발제자</li> </ul>
8:50-9:00	광고	

# 한국경제발전과정을 통해 본 한국경제양극화 현상의 원인

백 중 국 교수 | 경상대 정치외교학과, 기윤실 공동대표

## 1. 경제양극화 논의의 전개

이 논문은 최근에 들어와 한국인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경제양극화(economic polarization) 현상을 국가발전전략의 결과물이라는 역사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글이다.

양극화(polarization) 현상은 최근에 들어와 한국인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양극화라는 개념은 경제양극화(강신욱 2007)를 중심으로 제조업양극화(황선웅·신우용 2012), 기업양극화(이규복 2009; 김주훈 2012), 농가소득양극화(정진화·조현정 2012), 소비양극화(한교남·한범수 2011), 취업양극화(남춘호; 이성용·방하남 2009) 등에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지역양극화(정수열 2015; 이원호 2011), 교육양극화(최윤정·문상호·신충식), 정치양극화(박복영; 최형익), 이념양극화(홍성걸; 윤자호 2016; 이도형 2016)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언급되고 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양극화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경제양극화는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행위와 그 성과가 양 극단으로 분화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강신욱 2007, 10). 이는 불평등의 한 형태로서 해당 영역의 분포가 양 극점으로 균집화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빈부 격차 확대, 경제력 집중, 빈곤 확대, 중산층 붕괴, 계층 간 이동 가능성 축소 등의 현상과 자주 혼용되고 있다. 특히 양극화를 달리 표현한다면 중산층이 약화되는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최근에 전개되는 경제양극화 논의에 몇 가지 한계점들이 발견되고 있다.(강신욱 2007, 3-4). 첫째, 각 사회 부문 간의 격차 확대를 지적하고 개탄하지만 개탄의 이유는 막상 발견하기 어렵다. 둘째, 부문 간 격차 확대들이 지니는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여 정책 대안의 제시에서 있어서도 불일치와 혼선이 발견되고 있다. 셋째, 양극화의 원인으로 다양한 국내외 요인을 제시하지만 아직도 가설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양극화를 초래한 인과관계이다. 양극화 연구들 대부분이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때부터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형익의 견해에 따르면 이 연구들 대부분이 어째서 양극화가 이 때 부터 시작했는가를 명료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최형익 2009). 주로 비정규직 증가나 노동시장의 분절화를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핵심요인으로 국제적 경제위기를 지적할 뿐이다. 그 대책도 국민들의 재분배요구를 자제시키고 일자리 나누기 등의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이러한 강요는 막상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이 400조에 달한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후안무치한 발상”이며 왜 “정치경제학”적 시각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최형익 2009,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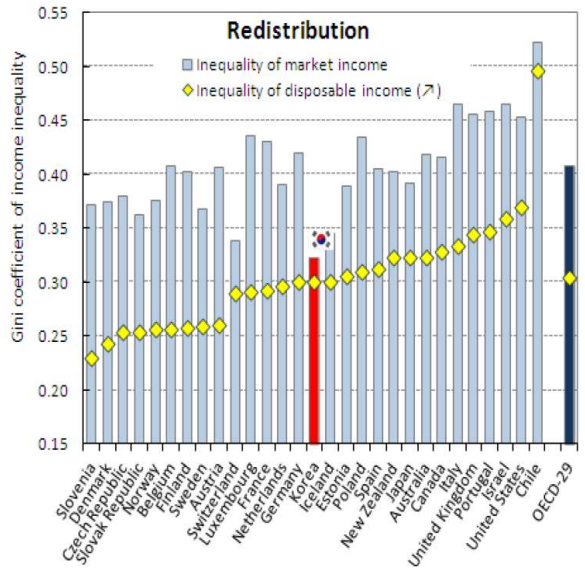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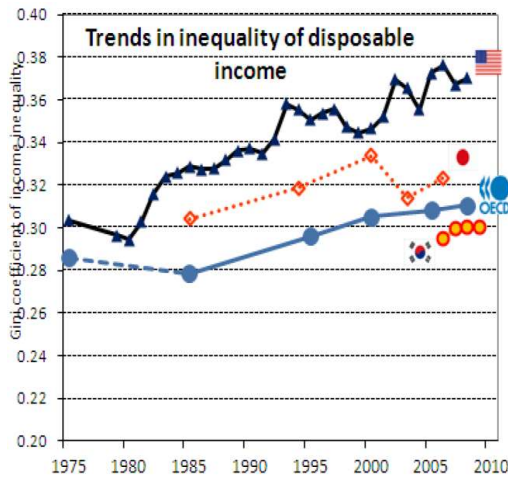
최형익의 분석은 양극화 논의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실제로 많은 양극화 분석들이 극히 미시적인 관점에서 가설을 설정하고 현존하는 데이터에 의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가설의 설정이 기존 연구의 한계 내에 포획되어 지나치게 형식적이며 현존하는 데이터의 질에 의문이 있다는 사실이다.<sup>1)</sup> 외국의 연구기관들조차도 한국에서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조세와 보조금 정책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구들은 분석과 대책에서 지속적으로 시장근본주의적 방안만 고수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양극화를 초래한 국가발전전략에 대한 역사구조적 분석이 필요하다.

---

1) 불평등도의 대표적 지수인 지니계수조차도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다. 동국대 경제학과 김낙년 교수에 따르면 현재 통계청의 지니계수는 가계동향조사가 산출 근거인데, 실제로는 소득 상위권이 축소 신고를 하는 등 허점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통계청 통계 대신 국세청의 소득세 정산 자료에 근거해 파악한 지니계수는 0.371로 치솟았다”고 강조했다. 이대로라면 한국의 지니계수는 OECD 하위 5위권이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8371519&cp=du> 2014년 5월 31일 검색.

## 2. OECD의 견해: 한국의 독특성

역사구조적 시각을 동원함에 있어서 한국의 보편성과 독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OECD가 발행한 2011년 보고서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중 한국 사례편은 한국의 보편성과 특이성을 잘 지적하고 있다. 주요 회원국들을 비교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는 한국의 불평등도가 OECD의 중간쯤이라 보도하고 있다.(OECD 2011).



출처: [www.oecd.org/els/social/inequality](http://www.oecd.org/els/social/inequality).

한국의 불평등도는 2006년 이래로 여타 OECD회원국들처럼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8년을 기준으로 볼 때 근로가능 연령층의 상위 10%의 연평균 가처분소득은 4,590만원이고 하위 10%의 연평균 가처분소득은 530만원이다. 상위과 하위의 차이는 9배에 달하는 데, 이는 OECD 회원국들의 평균과 비슷하다.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한국의 지니계수(0.30)는 OECD 평균(0.29) 수준이다. 극단적인 불평등에 시달리는 멕시코(0.45)나 터키(0.40)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상위과 하위의 격차가 커진다는 것은 양극화된 불평등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불평등 현상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

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한국의 가구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92%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의 불평등은 즉각적으로 가구의 소득불평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둘째, 1984년 이래로 임금불평등의 추세는 U자형 곡선을 그리고 있다. 1990년대 초까지 급격히 감소하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다시 같은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전일제 근로자 임금의 십분위율(상위 10% 대비 하위 10%의 비율)로 나타나는 임금차이를 보면 1984년의 4.6배, 1994년의 3.6배, 그리고 2008년의 4.8배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정부를 통한 재분배가 매우 제한적이다. 총 가처분 소득 중 정부이전소득의 비중이 3%로서 OECD 국가 중 칠레(0.9%) 다음으로 낮았다. OECD 국가들의 정부이전소득 평균은 16.2%였다. 가구소득의 조세부담률(8%)도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특히 상위 20% 소득그룹의 조세부담률은 9%에 불과했는데 OECD 평균이 37%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정부의 역할 부재가 소득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OECD 보고서는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들 사이에서 나타난 경제불평등 증가의 원인으로 몇 가지 요소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기술발전으로 인해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점이다. 정보와 통신기술의 발달은 고숙련노동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었다. 둘째, 국제적 압력에 의한 규제개혁이 임금불평등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규제개혁으로 고용이 확대되었으나 저임금 노동자들이 증가함으로써 불평등도 증가했다.

OECD 보고서가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에게 제안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증진으로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괜찮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둘째,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어야 한다. 의무교육기간 뿐만 아니라 노동생활 전체에 있어서 기술 습득에 참여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재분배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세와 보조금 지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히 경제위기 국면에서 저임금 집단이 더 큰 타격을 입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상위소득자들의 조세부담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소득의 뿔이 커진다는 것은 조세부담 능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보고서가 보여주는 한국 사례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주요 국가들에서 양극화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한국의 양극화는 단순히 계량적으로 볼 때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이다. 셋째, 한국 정부의 양극화 완화 노력은 OECD 수준으로 볼 때 매우 낮은 편이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양극화 문제는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이며 국가발전전략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 3. 적빈(赤貧)의 평등

1945년 일본제국주의가 끝나갈 즈음 식민지 백성들은 모두가 거지였기 때문에 평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지들 사이에는 양극화가 없다. 적빈(赤貧)의 평등이라고 말할 만하다.

해방 후 한국사회에서는 일종의 강요된 평등이 존재하였다. 조선조의 지주계층은 일제에 의해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다. 극히 소수의 지주와 민족기업들만이 일제와의 협조를 전제로 살아남았다. 내선일체를 추구하는 일제의 가혹한 수탈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적빈 상태에 놓여있었다. 남북분단으로 말미암아 일제가 추진했던 식민지산업화의 유산도 남한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1948년의 남한 제조업 생산고는 1939년 수준의 약 15퍼센트 정도에 불과했다.(차동세·김광석 1995, 32). 미국의 원조에 의하지 않고서는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연이어 발생한 한국전쟁은 일제하에서 다소간 살아남은 민족자본과 미군정이 분배한 약소한 적산마저도 철저히 파괴하였다. 김광석과 퇴머의 추계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해 1953년 국민총생산을 기준으로 약 85%가 파괴되었는데 1인당 순재화생산은 44퍼센트가 감소하였다.(Kim and Roemer 1979, 35). 전쟁 중에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도 약 150만 명에 달했다. 홍성원이 그의 소설 『남과북』에서 서술한 바처럼 “삶의 뿌리까지 철저히 파괴당한 집단은 각 계층 간에 장애물이 제거되어 비로소 모든 계층이 동일한 출발점에 평등하게 서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홍성원 2000, 282).

한국사회에서 적빈의 평등이 구조적 평등으로 기초를 잡게 된 것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 하에서 진행된 토지개혁 때문이다. 한국의 농지개혁은 성공적이었고 이로 인해 구조적 평등성은 확실히 자리를 잡게 되었다.(백종국 2009, 211-215). 제반 자료를 종합해 보면 1945년 당시에 자작농의 비율은 전체 농가 중 14.2 퍼센트였고 소작지 비율은 전체 토지 중 65.0 퍼센트였다. 그러나 15년 후인 1960년의 통계를 보면 자작농 비율은 73.6

퍼센트이고 소작지 비율은 12.0 퍼센트에 불과했다. 인구의 90퍼센트를 차지하는 농업인구가 10여년 만에 비교적 평등한 자영농체제에 전환되었다. 이들이야말로 향후에 전개될 수출대체산업화를 위해 자본과 노동의 공급하는 기반이었다.

해방 직후 한국인이 원하던 체제는 사회주의였지만 남한을 장악한 미군정은 미국과 유사한 형태의 자본주의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전상인 2001, 22-28). 일제로부터 압수한 적산과 미국이 제공하는 대한원조를 남한 자본가 육성의 지렛대로 사용하였다. 미국은 한국의 자본가들이 부정축재로 처벌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도 적극 보호하고 나섰다. 4·19 학생혁명 후 민주당 정부가 이승만 독재에 부역하였던 부정축재자들을 처리하려고 할 때에 미국은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인 장면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부정축재자들의 ... 재산 회수는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이 사유재산을 몰수한 것과 같은 행위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였다.(『동아일보』 1960.8.13). 이와 더불어 미국은 폴브라이트 프로그램 등 각종 교육지원정책을 통해 한국의 엘리트들이 자본주의체제에 익숙해지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 4. 신중상주의적 발전전략의 등장

어떤 국가의 발전전략이란 그 국가가 안전과 복지의 증진을 위해 추구하는 정책적 선택의 틀이다.(백종국 2009, 110). 특정한 국가는 특정한 발전전략을 선택하기 마련인데 이는 보편적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의 문제이다. 18세기 이래 실제로 전개된 국가발전전략들을 분류해 보면 세 가지 패러다임을 활용한 네 가지 패턴으로 나뉘고 있다.

세 가지 패러다임이란 자유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사회주의를 의미한다. 아담 스미스가 기틀을 놓은 자유주의는 이전에 존재했던 절대왕정의 패러다임을 중상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무역에 기초한 분업의 활성화를 추구하였다.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스미스의 주장이 강대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세계주의라고 비판하면서 독일의 통일과 성장을 위해서는 민족경제유기체적 사고에 기초를 둔 민족주의를 주장하였다. 칼 마르크스는 스미스와 리스트의 주장이 자본주의적 악덕을 은폐하고 노동의 착취를 온존시키려는 자본가들의 음모이며 자본주의 체제는 자체의 모순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으며 최종적으로 공산주의가 등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역사에서 나타난 발전전략은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우선 내부지향적 발전전략과 외부지향적 발전전략으로 분류된다. 내부지향적 발전전략에는 자급자족전략과 수입대체산업화전략이 있다. 전자는 대외무역을 최소화하고 국내자원을 총동원하여 자급자족하지는 체제이다. 후자는 대외무역을 허용하되 점차 수입품을 국내 생산품으로 대체한다는 전략이다. 외부지향적 발전전략에는 일차산품수출전략과 수출대체산업화전략이 있다. 전자는 석유나 쌀과 같은 일차산품을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하여 국부를 증진시키려는 전략이다. 후자는 수출주도형 경제를 운영하되 초기의 일차산품 수출을 점차 공산품 수출로 대체함으로써 산업화를 달성하려는 전략을 의미한다.

앞의 분류를 준용하자면, 한국의 발전전략은 민족주의에 입각한 수출대체산업화전략이었다. 박태균은 1960년대 초에 전개된 한국 내 발전전략의 경쟁을 조사한 바 있다.(박태균 2007). 그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처음부터 수출대체산업화를 발전전략으로 채택한 것이 아니었다. 민간주도형 개발론과 사회민주주의형 개발론 그리고 국가주도형 개발론이 서로 경쟁하고 있었다. 첫 번째는 미국과 함께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사상계 그룹의 견해이고, 두 번째는 진보당과 학생들을 비롯한 진보진영의 견해였으며, 마지막은 군사쿠데타를 추진한 군부의 견해였다. 박정희의 군사쿠데타가 성공함으로써 마지막 견해가 패권을 장악했으며 수출대체산업화는 이들의 정책적 목표가 되었다.

민족주의에 입각한 수출대체산업화전략은 신중상주의적(Neomercantilist) 발전전략이라 부르기도 한다. 한국의 신중상주의적 발전전략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은 국민주력기업(national champion)으로서 재벌을 육성했다는 점이다. 한국의 재벌은 규모의 경제뿐만 아니라 범위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된 한국만의 특징적인 기업조직이다. 대만의 사례에서 보는 바처럼 수출대체산업화를 발전전략으로 선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재벌을 육성하는 것은 아니다. 구해근은 이 차이가 리더십의 차이이기보다는 각 사회가 이전에 겪었던 계급투쟁의 경험에서 출발한다고 보았다.(Koo 1987, 177). 이유야 어찌했던 한국의 양극화 현상은 근본적으로 재벌을 발전전략의 핵심 행위자로 선택하고 보호육성한 데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한국 재벌은 그 기원에서 뿐 아니라 성장과 생존에서도 공동체적 지원에 의존했다. 수출대체산업화를 성공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는 한 때 무려 38가지에 달하는 조세와 관세, 금융 등의 수출진흥책을 실시했다.(사공일·존스 1981, 126). 자본과 기술은 수출주도

를 이끌고 있는 재벌기업 중심으로 제공되었는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이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예컨대 임혜란이 작성한 표에 따르면 1970년대 후반 대기업에 제공된 평균적 금융특혜율은 전체 공급자본의 2.98 퍼센트에 이르고 있다.(Lim 1998, 76). 한국은행 추계에 따르면 1972년에서 1981년 사이에 투자된 고정자본액은 81조 4천억 원이었으므로 여기에 평균 금융특혜율을 곱하면 무려 2조 4천억 원이 강제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백종국 2009, 196)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정부는 재벌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 다수의 자본을 강제로 재벌에 이전하는 조치를 실시하였다. 1972년 8월 3일에 단행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즉 사채동결령이 그 사례이다. 이 시기에 대기업들은 과도한 투자와 도덕적 해이로 인해 붕괴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이 날짜로 4만767건, 3,456억 원의 사채를 동결하고 2,000억 원의 특별금융채권을 발행하여 단기대출을 대환하도록 하였으며 658억 원의 산업합리화자금도 따로 지원했다.(이성형 1985, 272-279; 백종국 2009, 200). 1997년 11월의 외환위기 때에는 무려 168조 7천억 원을 공적자금으로 투입했다.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것이고 회수를 목표로 하지만 채권의 이자와 원금에 대한 손실은 국민이 직접 부담하고 있었다.)

## 5. 발전전략의 전환

지금까지 전개된 한국의 발전전략을 보면 다수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소수 재벌의 성장을 도운 과정이었다.<sup>3)</sup> 가진 자에게 덜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주는 체제가 진행되면 경제양극화가 심화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재벌육성전략의 성공으로 국부 전체가 증가한다 해도 양극화의 발생은 논리적으로 피할 수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재벌 자체를 해체하고 모두가 동일한 대우를 받는 서구식의 전문 대기업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재벌 체제가 누리는 범위의 경제를 포기해야 한다. 둘째는 재벌의 역할을 인정하되 양극화가

---

2) 정부는 1997년 11월 이후 투입한 공적자금 168조7000억 원 가운데 111조6000억 원을 회수했다. 회수율은 66.2%다. <http://www.too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1953>. 2016년 3월 31일 검색.

3) 최근에 논란이 되는 전기요금체제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100KW를 기본으로 100KW가 증가할 때 마다 거의 징벌적인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의 독점 공급자인 한국전력은 2015년에 11조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2조 원의 현금배당을 했다. 이를 빌미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산업용 전기료 인하를 요구하자 한국전력은 지난 10년간 100대 대기업이 할인 받은 전기료는 9조4300억 원이라고 밝혔다. <http://www.ezy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8935> 2016.3.30. 검색.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체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이다. 특히 조세의 강화와 소유권의 제한을 통해 재벌 체제가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두 번째 방안이 유력하다.

신중상주의체제는 강력한 독재적 국가가 재벌을 통제함으로써 재벌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감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중상주의체제는 자신의 성공이 초래한 세 가지 역사적 모순—도시화, 독점화, 국제화의 모순—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붕괴하였다.(백종국 2009, 278). 이후에 발생한 상황은 국가의 재분배 노력이 취약하다는 OECD의 2011년 보고서가 잘 증언하고 있다. 상위 20 퍼센트의 OECD 평균조세부담율이 37 퍼센트인데 반하여 한국은 9 퍼센트에 불과하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상위 소득자, 더 구체적으로 독점재벌에 편파적으로 호의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의 거시적 구조를 실증적으로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있다. 예컨대 유경준은 양극화라는 개념에 의문을 표하고 실제 자료들을 검토해보면 빈부격차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경준 2007). 황인학과 최원락은 경제력집중의 강화라는 현상 자체에도 의문을 표하면서 이는 제도학파의 기업패권가설이나 기업집단을 비판적으로 보는 완전경쟁균형론의 비현실적 가설이라고 비판하고 있다.(황인학·최원락 2013). 이에 대하여 위평량은 지금도 재벌그룹으로의 경제력집중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8대 재벌그룹이 국가자산의 31.07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위평량 2013).

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구조적으로 명백한 경제양극화의 심화를 파악하지 못하는가를 설명하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경제양극화의 계량적 분석과 적절한 자료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는 한국의 재벌과 다른 선진국 대기업 사이에 존재하는 민주적 통제라는 핵심적 차이점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그동안 진행된 양극화의 완화노력으로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경우일지라도 시장근본주의적 시각을 벗어나 좀 더 폭넓고 창조적인 분석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양극화 현상은 재벌을 앞세우는 수출대체산업화로 공동체적 안전과 풍요를 달성하려는 한국의 발전전략이 모순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모순을 되돌리려면 재벌이 진정으로 국민주력기업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와 이념을 개발하고 정착시켜야 한다.<sup>11</sup>

## 참고문헌

- 강신욱 외. 2007. 『경제·사회 양극화의 진단과 대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7-01.
- 공정거래위원회. 2015. 『2015년판 공정거래백서』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 김문조. 2008. 『한국사회의 양극화: 97년 외환위기와 사회불평등』 서울: 집문당.
- 김주훈. 201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에 관한 해석.” 『KDI Focus』 2012.4.30.  
1-7.
- 남춘호. 2011. “일자리 양극화와 이동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35권 1  
호: 29-69.
- 박복영. 2014. “미국의 소득불평등과 정치양극화.” 『비교경제연구』 21권 1호: 77-110.
- 박태균. 2007. 『원형과 변용: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기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백응기. 2012. “경제양극화 완화를 위한 경제정책 방향.” KIF working paper. 2012-2:  
1-65.
- 백종국. 2009. 『한국 자본주의의 선택』 파주: 한길사.
- 사공일·L.P. 존스. 1981. 『경제개발과 정부 및 기업가의 역할』 서울: 한국개발원.
- 서울사회경제연구소. 2006.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 서울: 한울아카데미.
- 설윤. 2009. 『양극화와 불균등도의 최근추이에 대한 분석』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 신동균·장지연. “소득재분배정책이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완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사회보장연구』 26권 4호: 357-384.
- 위평량. 2014. 『재벌 및 대기업으로 경제력 집중과 동태적 변화분석(1987-2012)』 서울:  
경제개혁연구소. 2014-02호.
- 유경준. 2007.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 한국개발연구원 2007.4.
- 유경준. 2012.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KDI Focus』 2012년 4월 23일(15호).
- 유태환 외. 2008. 『양극화 시대의 한국경제』 서울: 후마니타스.
- 유필무 외. 2005.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서울: 소화.
- 윤자호. 2016. “금수저와 흙수저의 세상에서 ‘계급에 대해 말하지않기’” 『노동사회』  
2016년 3·4호: 100-102.
- 위평량. 2014. 『재벌 및 대기업으로 경제력 집중과 동태적 변화분석(1987-2012)』 경제  
개혁연구소 경제개혁리포트 2014-02.
- 이규복. 2009. “대·중소기업간 수익성 양극화와 경제성장: 기업간 협상력(bargaining

- power)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 2009.3.
- 이도형. 2016. “금수저·흙수저 세대들에게.” 『현상과 진상』 2016년 3월호: 39-43.
- 이성용·방하남. “성·연령별 중·고령 노동자의 취업 양극화 분석.” 『한국노년학』 29권 2호: 593-610.
- 이성형. 1985. “국가, 계급 및 자본축적: 8·3조치를 중심으로” 최장집 편. 『한국 자본주의와 국가』 서울: 한울.
- 이용하·안종범. 2011. 『인구고령화 및 소득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보장정책 추진 방향 연구』 국민연구연구원 정책보고서 2011-01.
- 이원호. 2011.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사회적 배제의 형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4권 2호: 129-142.
- 장지연·신동균. 2010. “소득 양극화와 자살.” 『사회보장연구』 26권 2호: 1-21.
- 전상인. 2001. 『고개 숙인 수정주의: 한국현대사의 역사사회학』 서울: 전통과현대.
- 정수열. 2015.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도시 내 계층별 거주지 분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8권 1호: 1-16.
- 정진화·조현정. 2012. “농가소득의 양극화.” 『농업경영·정책연구』 39권 3호: 420-450.
- 차동세·김광석 편. 1995. 『한국경제반세기: 역사적 평가와 21세기 비전』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최윤정·문상호·신충식. 2009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1-20.
- 최형익. 2009. “사회양극화와 젠더민주주의: 촛불집회에 대한 하나의 해석.” 『한국정치연구』 18권 2호: 27-52.
- 한교남·한범수. 2011. “한국사회 여가소비의 양극화 현상 탐구.” 『관광학연구』 35권 9호: 53-72.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소득양극화 현상 완화를 위한 소득세제 개편방안 연구』 2013.12.
- 홍성걸. 2012. “이념 양극화와 정책과정: 국가보안법과 의약분업에 대한 비교사례연구.” 『사회과학연구』 24권 2호: 1-37.
- 홍성원. 2000. 『남과북 5』 (1977) 서울: 문학과지성사.
- 황덕순 외. 2013.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방안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황선웅·신우용. 2012. “우리나라 제조산업내 기업규모에 따른 소득양극화 및 불균형에 관한 연구.” 『금융공학연구』 11권 2호: 119-146.
- 황인학·최원락. 2013. “경제력집중 통계의 진실” 『KERI Insight』 한국경제연구원

13-04: 1-15.

Kim, K.S., and M. Roemer. 1979. *Growth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Koo, Ha-gen. 1987. "The Interplay of State, Social Class, and World System in East Asian Development: The Cases of South Korea and Taiwan," in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Asian Industrialism*, edited by Frederic C. Deyo.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Lim, Hae-Ran. 1998. *Korea's Growth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New York: Macmillan.

OECD. 2011. "Divide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한국편)" [www.oecd.org/els/social/inequality](http://www.oecd.org/els/social/inequality).

Weber, Max. 1946.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translated and edited with an introduction by H.H. Gerth and C. Wright Mil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사도 바울은 다양한 도덕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던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고전5:12). 바울은 불신자들이 행하는 도덕적 부패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들과 일상적인 교류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까지 관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도덕적인 부패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로부터 축출하는 조치까지도 불사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이중적인 명령을 제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고전5:13)라는 말씀이 보여 주듯이 도덕적인 악을 행하는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교회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할 자들이므로 이 삶에 장애가 되는 생활관습 특별히 도덕적으로 부패한 생활관습은 철저하게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 한국사회 경제적 갈등과 “불평등함정”의 극복방안

윤 덕 룡 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PI(한반도평화연구원) 부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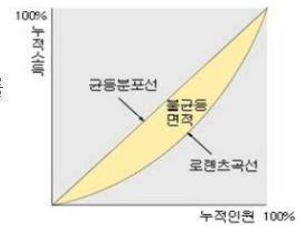
## 1. 문제제기

- 한국사회의 경제적 갈등은 어느 정도인가?
- 한국사회의 경제적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 경제적 갈등을 꼭 풀어야 하나?
- 갈등해결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 교회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갈등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 교회가 우리사회의 경제적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 II. 한국사회의 경제적 갈등현상

- 경제적 갈등지수는 주로 경제적 불평등(inequality) 지수로 대용하고 있음.
- 경제적 갈등지수, 경제적 불평등지수, 소득 불평등지수와 같은 개념들이 유사한 내용으로 혼용되고 있음.
- 대표적인 경제적 불평등 지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로렌츠(Lorenz)곡선: 가로축에 소득액순으로 소득 인원수의 누적 백분비, 세로축에 소득금액의 누적 백분비를 표시할 때 소득금액의 누적 백분비를 나타내는 곡선. 소득분포가 완전히 균등하면 대각선과 일치하며 곡선과 대각선사이의 면적이 불평등 지표로 쓰임.



4



## II. 한국사회의 경제적 갈등현상

- **지니계수:** 로렌츠곡선의 불균등 면적을 대각선 아래 영역으로 나눈 값. 0~1사이의 값을 가지며 작을 수록 균등분배에 가까워짐.
- **5분위 배율:** 도시 근로자 가구를 월평균 소득이 작은 가구부터 큰 순서로 5개의 소그룹으로 나눌 때 최상위 20%에 해당하는 가구소득을 최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구소득으로 나눈 값.
- **10분위 배율:** 상기 방식으로 하되 10개의 소그룹에서 최상위와 최하위를 비교한 값.
- **상대적 빈곤율(relative poverty rate):** 소득의 전체분포 가운데 중위값(median)의 50% 미만의 인구비율. 적을수록 균등분배.



5





## II. 한국사회의 경제적 갈등현상

### 1. 김낙년, 김종일 (2013)

“소득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집중도가 1996년에는 전체소득의 7% 수준이었으나 2010년에는 전체소득의 12% 수준으로 급상승”

### 2. 강신욱 (2013)

“도시가구의 소득 지니계수 악화”(시장소득기준)  
**0.266 (1990년) → 0.310 (2012년)**  
“높은 노인 빈곤율”  
**45.1% > 13.3% (OECD 30개국 평균)**

### 3. Pyo and Song (2015)

“2007-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가 상위 20%의 고소득층의 소득과 하위 20%의 저소득층의 소득간의 격차를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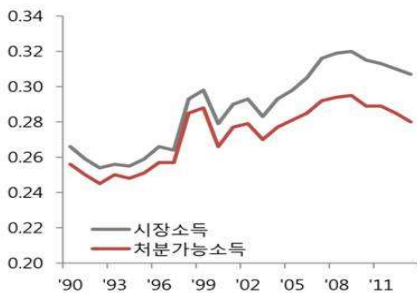
6



## II. 한국사회의 경제적 갈등현상

한국지니계수(도시 2인 이상 가구)

5분위배율(도시 2인 이상 가구)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김선태(2014)에서 인용



7



## II. 한국사회의 경제적 갈등현상

### 한국 및 OECD 상대빈곤율



자료: OECD

### 한국 및 OECD 10분위배율



자료: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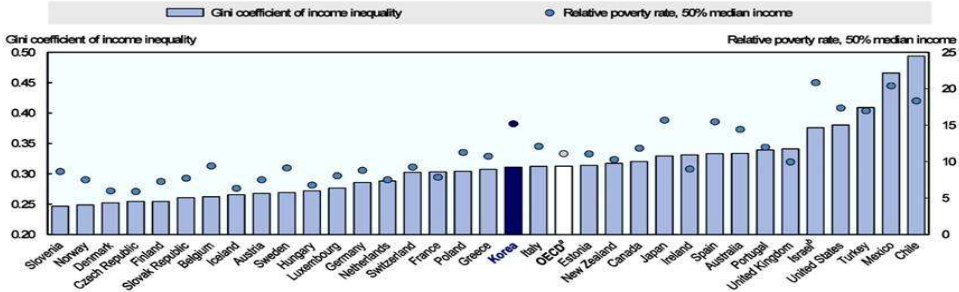


8



## II. 한국사회의 경제적 갈등현상

###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수준



Note: Levels of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2010 (or closest). Countries are ranked in ascending order of the Gini coefficient of income inequality which ranges from 0 (perfect equality) to 1 (perfect inequality). Relative poverty rates are defined as the share of individuals with income less than 50% of the median for the entire population. Data refer to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disposable income in cash across people.

- a) Unweighted average of the 34 OECD countries.
- b) Information on data for Israel is available at: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Source: Calculations based on the OECD Database on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www.oecd.org/els/social/inequality](http://www.oecd.org/els/social/inequality), Preliminary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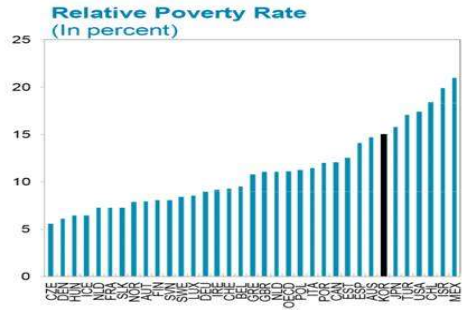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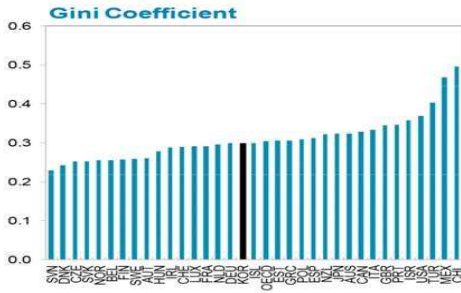


9



## II. 한국사회의 경제적 갈등현상

### 한국의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 국제비교



Source: OECD.

Note: Data for late 2000s. The Gini coefficient can range from 0 (perfect equality) to 1 (perfect inequality). Relative poverty is defined as the share of the population that lives on less than half of the median 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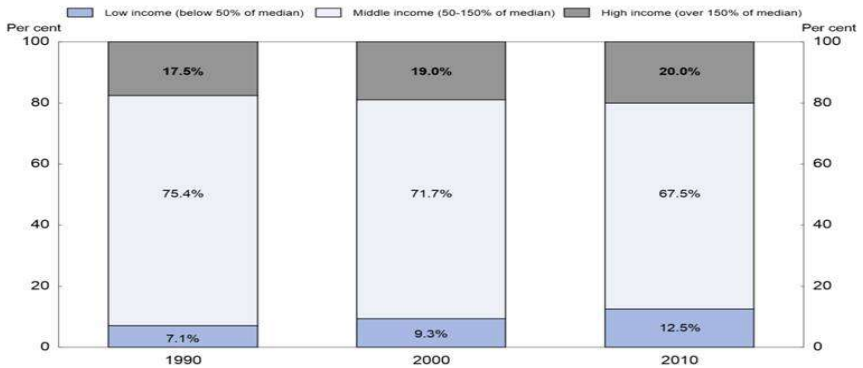
10



## II. 한국사회의 경제적 갈등현상

### 소득불평등 심화에 따른 중산층의 위축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50%와 150% 사이의 소득을 가진 자로 정의된다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



### III. 경제적 갈등과 불평등 함정(Inequality Trap)

#### 빈곤은 게으름과 잘못된 선택의 결과인가?

- 불평등 함정(Inequality Trap): 제도나 권력구조가 엘리트계층의 이해를 주로 반영하여 기존 체제의 지속에 기여함으로써 불평등이 순환적으로 재생산되는 구조를 말함. (Roa, 2006)
- 경제적 불평등함정 (Economic Inequality Trap): 경제, 정치, 사회적 환경이 비교우위가 주로 부유층에 있도록 지원하여 지속적인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 (Tilly, 1998)
- 불평등 함정의 존재를 확인: Daymon & Gimet(2007)은 71개국에 대한 패널분석으로부터 불평등 함정이 존재함을 확인
- 불평등 함정의 주요 결정요인(Determinant): 경제적 기회를 특정계층(혹은 집단)에게만 허용하여 경제적 부를 편향적으로 분배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금융접근성, 교육접근성 등이 확인됨.



### III. 경제적 갈등과 불평등 함정(Inequality Tr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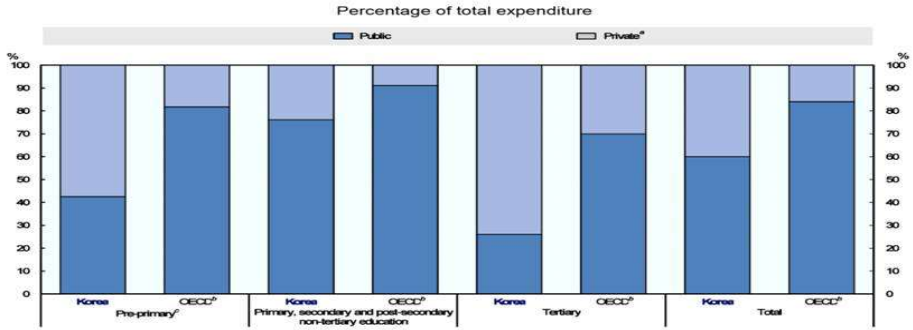
#### 한국에도 불평등 함정이 존재하는가?

- 한국에서는 교육의 기회가 부유층에 편향되어 부를 세습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 교육비의 개인 부담이 높고 사교육이 유명대학의 입학에 필수적이어서 좋은 대학 진학의 기회가 부유층에 유리.
  -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이후 사회적, 경제적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
- 한국의 금융시장도 빈곤층에는 접근성이 제한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제공되고 있어 불평등 요인으로 작용.
  - 담보할 재산이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금융시장 접근성에 영향을 미쳐서 부유층은 오히려 적은 비용으로 금융을 활용하나 서민층은 더 비싼 이자를 내야하거나 접근성이 제한됨.
  - 금융기회의 제한은 경제적 기회의 제한으로 이어져서 부유층이 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을 제공.



### III. 경제적 갈등과 불평등 함정(Inequality Trap)

#### 한국사교육비 지출의 국제비교(2009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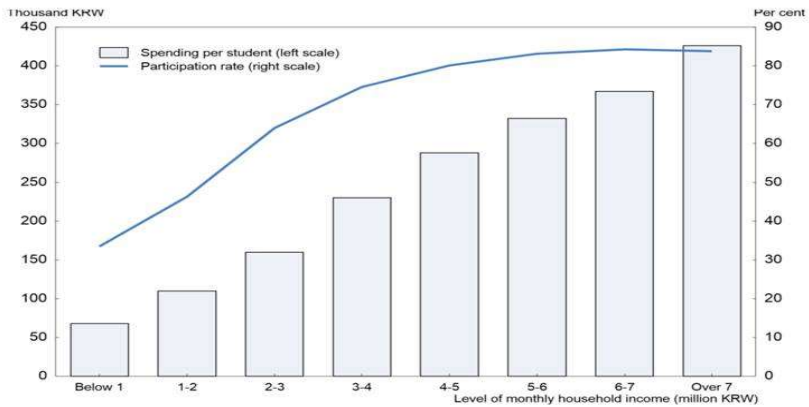
- a) For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education based on full-time equivalents. The figures do not include spending on private after-school institutions, such as *hagwons*.
- b) Unweighted average of the 34 OECD countries' data when available.
- c) For children aged 3 years and older.

Source: OECD (2012a),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ag-2012-en>, Tables B3.1, B3.2a and B3.2b.



### III. 경제적 갈등과 불평등 함정(Inequality Trap)

#### 가구소득과 과외지출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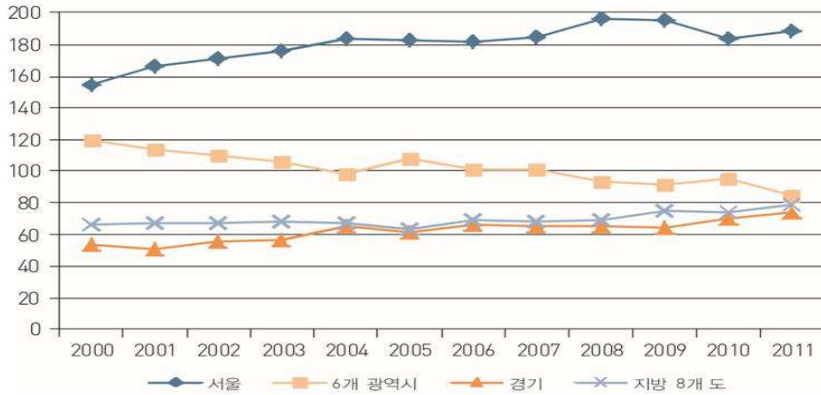


출처: OECD (2014b).



### III. 경제적 갈등과 불평등 함정(Inequality Trap)

전국 평균 대비 지역별 서울대 진학률 변화(100=전국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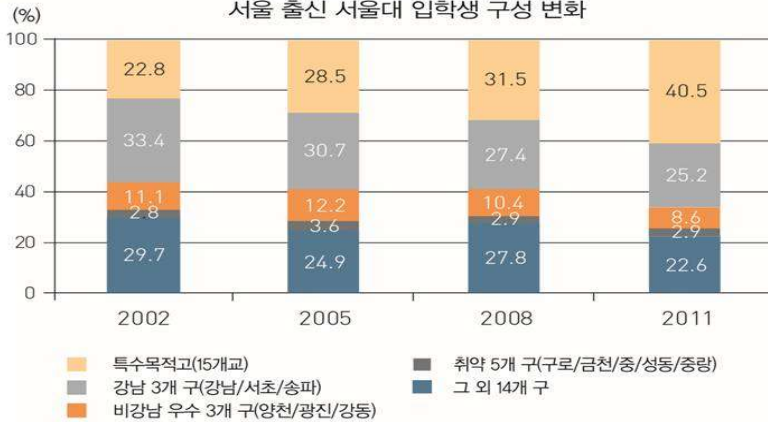
자료: 김희삼(2015)

16



### III. 경제적 갈등과 불평등 함정(Inequality Trap)

서울 출신 서울대 입학생 구성 변화



자료: 국회 자료, 「고교별 서울대 입학생 수」, 각년도(김영철[2012]에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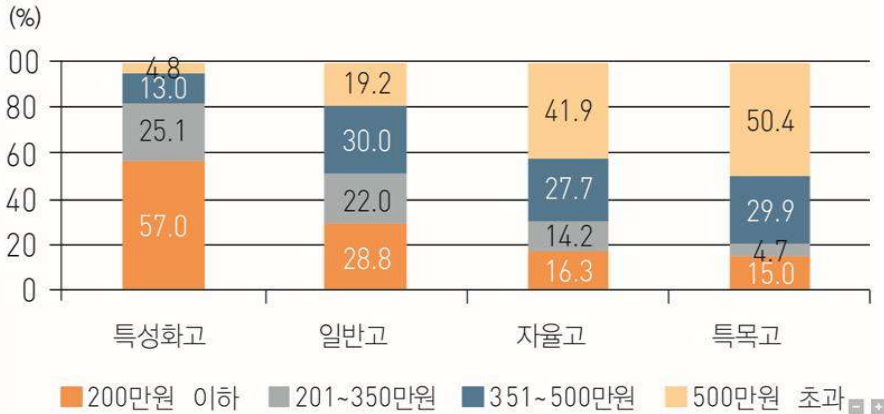
자료: 김희삼(2015)

17



### III. 경제적 갈등과 불평등 함정(Inequality Trap)

#### 서울지역 고1학생 학교유형별 가구소득분포



자료: 김희삼(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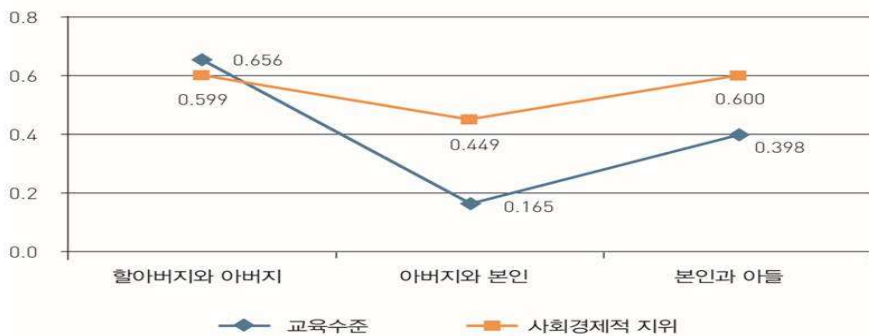


18



### III. 경제적 갈등과 불평등 함정(Inequality Trap)

#### 교육수준 및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간 상관계수



주: 교육수준은 학력별 교육연수이며, 사회경제적 지위는 해당 가족이 중년(40~50대)인 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세대의 전체 한국인과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인 위치로서 응답자가 10점 척도로 평가한 수치를 나타냄.

자료: 김희삼(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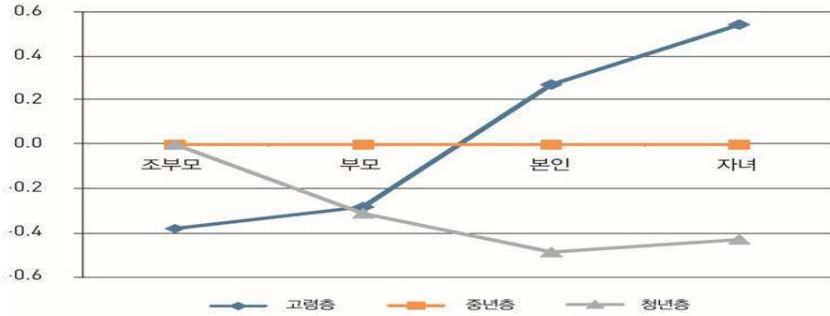


19



### III. 경제적 갈등과 불평등 함정(Inequality Trap)

#### 교육의 계층이동 기능에 대한 세대별 견해



주: 관측치 수는 고령층(50~69세) 983명, 중년층(36~49세) 993명, 청년층(20~35세) 1,024명이며, 각 세대의 교육 사다리 역할에 대한 중년층의 평가를 기준(0점)으로 할 때 고령층과 청년층의 평가가 보여주는 통계적 차이를 나타낸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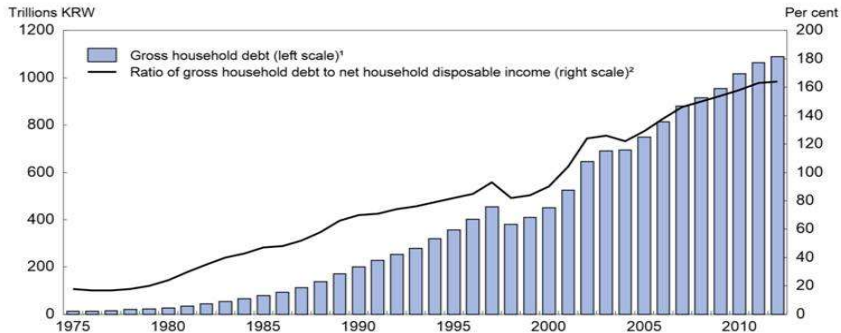
자료: 김희삼(2015)

20



### III. 경제적 갈등과 불평등 함정(Inequality Trap)

#### 가계부채의 급증



1. 실질가치 기준 (2010 CPI 로 조정).
  2. 현행 가격, SNA1993 에 기초하여 작성.
- 출처: 한국은행.



21





## IV. 경제적 갈등의 문제점과 정책대응

### 1. 경제적 갈등 심화의 문제점: 갈등을 방지하면 안되나?

- 특정계층에 집중되는 경제적 유인을 차지하기 위해 과도한 경쟁이 유발되어 지나친 비용과 사회적 분열을 가져옴 (예: 한국의 사교육)
  - 우수한 잠재력을 가진 인재가 사장되고 능력이 부족한 상속자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져 사회적 생산가능곡선을 위축시킬 수 있음
  - 부의 편향적 분배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유효수요의 감소를 가져와 지속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경제적 불평등 함정은 경제주체들에게 노력과 혁신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킴으로 사회전반의 생산성을 하락시켜서 지속성장을 저해함
  - 경제적 불평등성의 확대는 결국 생산성의 감소 및 생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국가를 패망시키는 원인이 되게함. (Acemoglu & Robinson)
- <참조> Why Nations Fail? By Acemoglu & Robinson



## IV. 경제적 갈등의 문제점과 정책대응

### 2.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는 가능한가?

- 경제적 불평등은 단순히 시장의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 선택의 산물이다. 세계는 가진자와 못가진자로 구분되는 것만이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성을 타개하려는 노력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로 구분할 수 있다. 공동번영만이 유일하게 지속가능한 번영의 형태이다. (Stiglitz)

#### 주요 대응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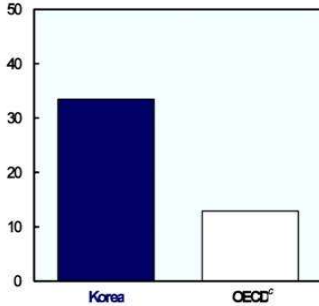
- :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갈등 해소의 대표적 정책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사회적 지출(Social Spending)의 확대:
  - 보호적 기능: 생존, 생계 및 인간존엄성 보장
  - 경제적 약자의 기회확대
- 둘째, 교육기회의 확대
- 셋째, 포용적 금융제도의 도입 등...



## IV. 경제적 갈등의 문제점과 정책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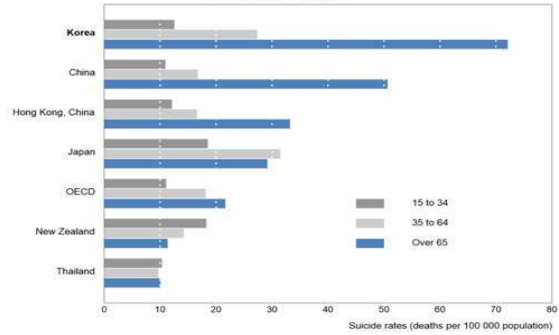
### 한국의 자살율 OECD최고

Deaths per 100 000 population (standardised rates),  
2010 (or nearest year)



### 한국의 노인 자살율 OECD최고

2010 년 또는 최근 연도



출처: OECD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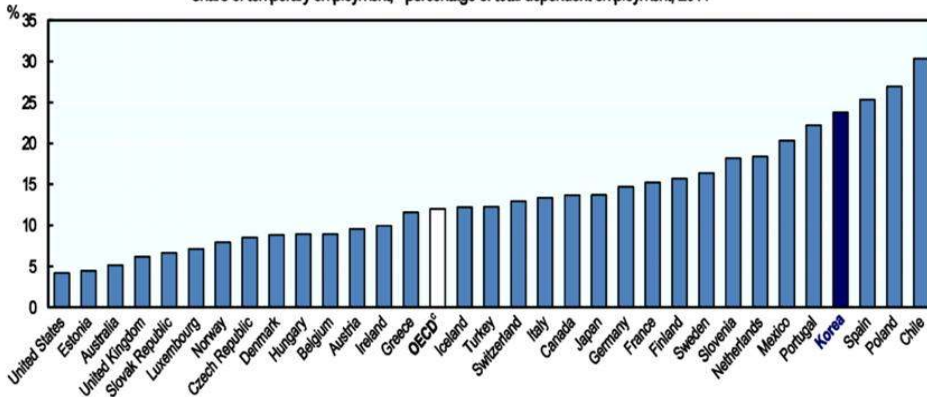
24



## IV. 경제적 갈등의 문제점과 정책대응

### 한국의 계약직 비중 OECD 4위

Share of temporary employment,<sup>a</sup> percentage of total dependent employment, 2011<sup>b</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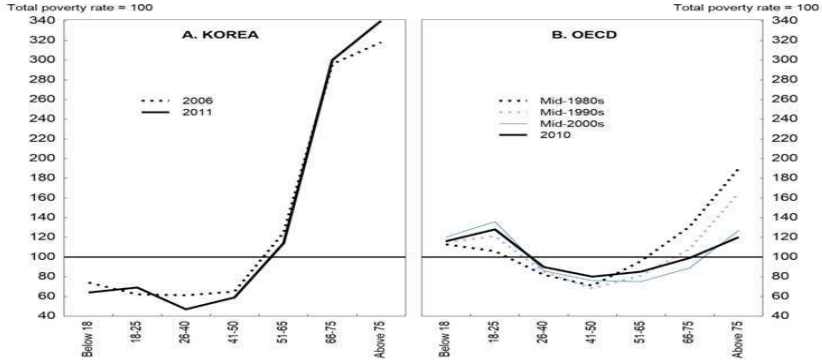


25



## IV. 경제적 갈등의 문제점과 정책대응

### 연령별 상대적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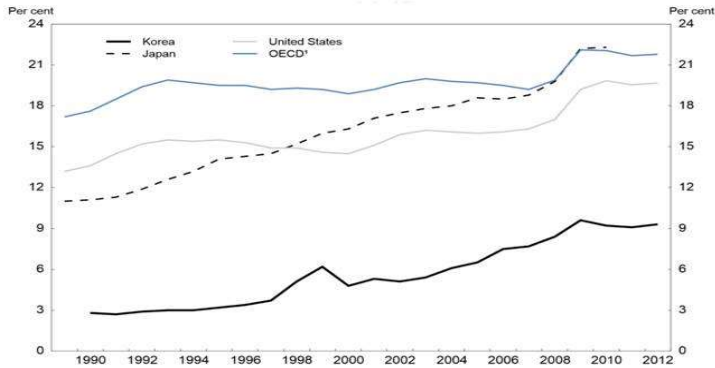
1. 당해 그림은 전체 인구의 상대 빈곤율을 100으로 정한 지수를 사용하여 각 연령대 집단의 빈곤율을 보여 준다. 빈곤은 전체 인구 중위 소득의 50%로 설정되었다. OECD 평균치에는 20개 회원국이 포함된다.

출처: 소득 분배와 빈곤에 대한 OECD 데이터베이스.



## IV. 경제적 갈등의 문제점과 정책대응

###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GDP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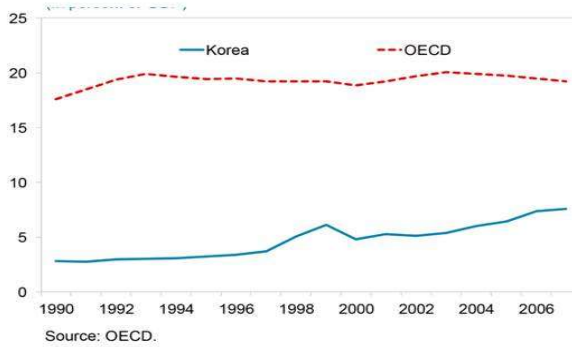
1. 비가중 평균. 2000년부터는 34개 OECD 국가에 대한 데이터가 이용 가능하다. 2000년 이전에 대해서는 보간법을 사용하여 23개 OECD 국가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출처: OECD 사회복지지출 데이터베이스.



## IV. 경제적 갈등의 문제점과 정책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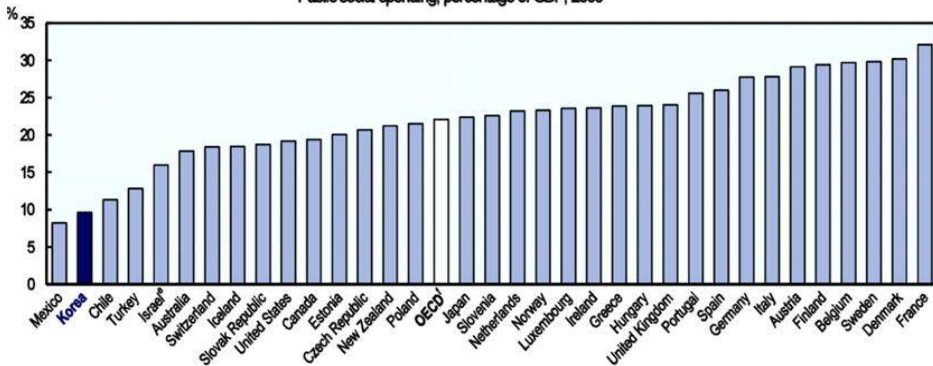
### 사회적 지출비중 추이(GDP기준)



## IV. 경제적 갈등의 문제점과 정책대응

### 공적 사회적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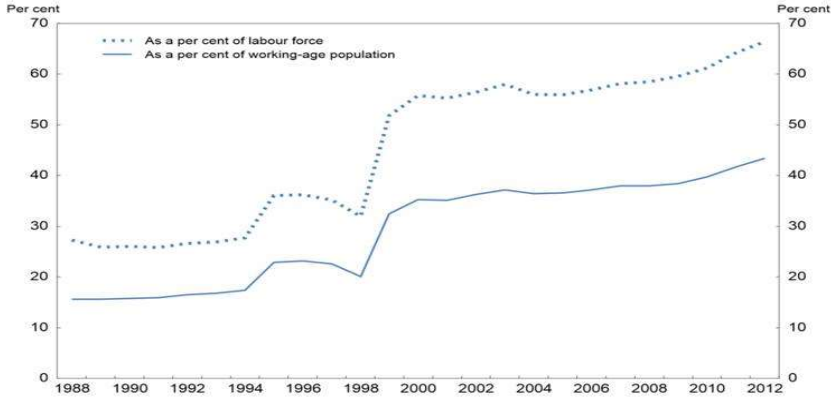
Public social spending, percentage of GDP, 2009<sup>2</sup>





## IV. 경제적 갈등의 문제점과 정책대응

### 국민연금제도의 포괄범위



출처: 국민연금공단 및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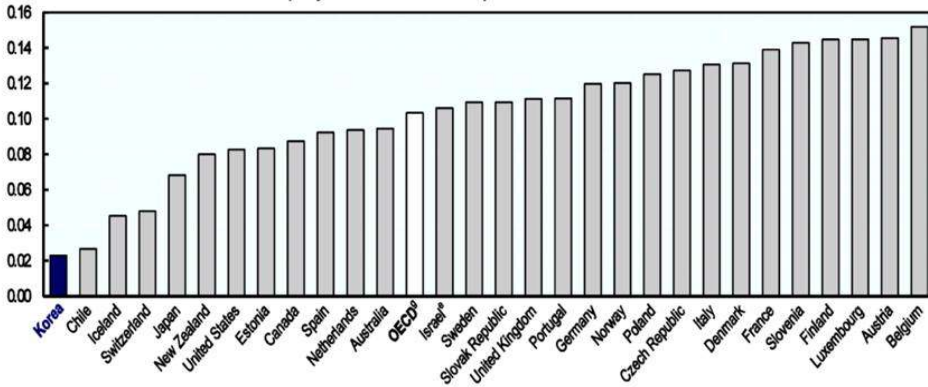
30



## IV. 경제적 갈등의 문제점과 정책대응

### 세금 및 이전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

Difference between inequality of market income and disposable income based on the Gini coeffici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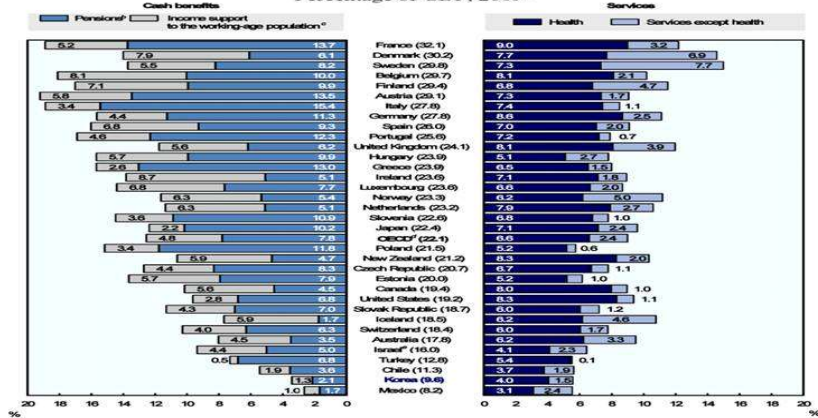
31



## IV. 경제적 갈등의 문제점과 정책대응

### 한국의 사회적 지출은 전 분야에서 최하위권

Percentage of GDP,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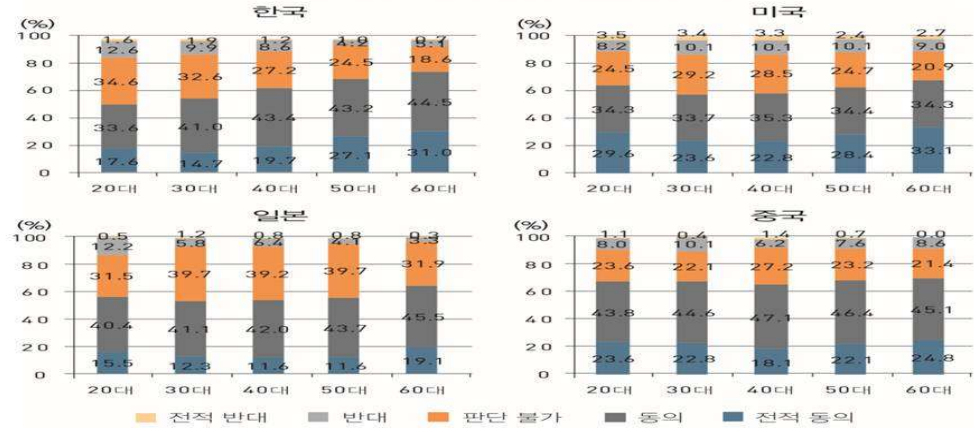


Note: Countries are ranked by decreasing order of public social expenditure as a percentage of GDP. Spending on Active Labour Market Programs (ALMPs) cannot be split by cash/services breakdown; they are however included in the total public spending (shown in brackets).



## IV. 경제적 갈등의 문제점과 정책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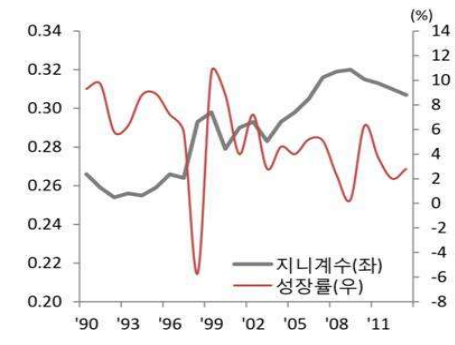
### 성공을 위한 노력에 대한 믿음의 연령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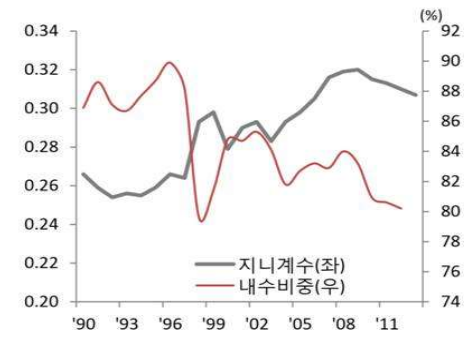
## IV. 경제적 갈등의 문제점과 정책대응

### 한국의 지니계수와 경제성장률



자료: 통계청

### 지니계수와 내수비중



자료: 통계청

김선태(2014)에서 인용



34



## V.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대책

### 1. IMF(2012)가 제시하는 대책

#### 소득불평등감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한 대책

- 한국은 OECD 국가 평균치대비 사회적 지출갭이 존재하므로 사회적 지출의 확대로 소득 불평등을 축소하고 성장을 제고할 수 있음.
- 한국의 근로연령 인구의 감소를 고려하여 생산성 제고와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을 잘 고안하여 시행한다면 소득불평등감소와 성장이 상호연계되는 선순환(virtuous cycle)을 만들 수 있음.
-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여성고용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조준된 사회적 지출의 확대는 소득 불평등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모델분석의 결과가 보여줌.



35



## V.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대책

### 1. IMF(2012)가 제시하는 대책

#### 소득불평등 감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한 대책

##### • 정조준된 사회적 지출정책이 필요:

- 취학전 아동교육에 대한 투자확대로 저소득층 자녀의 초기 발달을 지원하여 향후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소득 불평등성 축소
- 취학전 아동보호 확대 및 산후보호 확대로 여성인력의 고용제고
- 사교육 의존도 축소로 교육의 불평등성 감소시켜야.
- 장기적으로는 교육개혁으로 한시적 근로자들의 직업교육을 확대하여 생산성을 제고하여 정규직 전환을 돕고 (특히 서비스 분야),
- 정규직 보호수준을 낮추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 • **조속히 점증적(incrementally)**으로 사회적 지출확대 필요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재정적 여유가 사라지기 전에 조속히 점증적으로 사회지출을 늘려서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 V.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대책

### 2. OECD(2014)가 제시하는 대책

#### 사회통합 및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정책 권고 사항

##### (1) 빈곤, 특히 노인 빈곤의 감축

- 기초노령연금은 최저 빈곤 수준의 노인층이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
- 국민연금의 포괄 범위를 확대하고, 소득대체율을 약 50% 수준으로 유지하며 연금 지출을 충당할 수 있도록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
- 기업 연금의 도입을 가속화하고, 개인 연금을 강화함으로써 은퇴에 대비한 민간 저축을 확대.





## V.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대책

### 2. OECD(2014)가 제시하는 대책

#### 사회통합 및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정책 권고 사항

#### (2) 기타 분야

-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 보호는 감축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 보험 및 직업훈련을 강화함으로써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
-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를 억제해 가면서 가계부채의 연체문제에 대처.
- 양질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과 보육의 질 개선 등을 통해 고용률, 특히 여성의 고용률을 제고.



## IMF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 <IMF 보고서>

- ◆ Top 20 percent's income increases by 1 % point  
⇒ GDP growth rate decreases by 0.08 1 % point.
- ◆ The bottom 20 percent's income increases by 1 % point  
⇒ GDP growth rate increases by 0.38 % point.
- ☞ Worsening of income inequality is clearly the most pressing issue of our time and, along with it, the reality of the trickle-down effect should be assessed.



## VI. 교회가 할 일

- 첫째, 인식의 전환: 한국사회에서 가난은 게으름과 잘못된 자기결정에만 귀책사유를 돌릴 수 없다. 불평등 함정(inequality Trap)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곤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데 크리스찬의 적극적 동참필요.
- 둘째, 교육개혁 및 교육지원: 미션스쿨에서 먼저 성적만이 아니라 가능성을 위주로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자녀들을 선발하는 제도 도입, 성적보다 소득중심의 장학금 제공 등을 적극추진.
- 셋째, 전국 교회에서 저소득층을 배려하여 장학금 확대, 방과후 학교, 보육시설 운영 등으로 education divide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동 전개
- 그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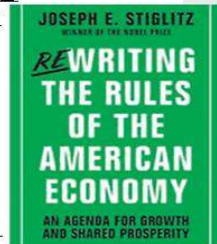
## “Rewriting the Rules of the American Economy)”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불평등 문제는 잘못된 경제정책을 선택하면서 심화됐다. 그 선택의 첫 단추는 1980년대 미국을 이끈 레이거노믹스다. 그 후 3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근로자 90% 이상의 실질임금이 제자리걸음이다.

최저임금 수준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오히려 40~50년 전과 비슷하다. 미국 경제가 대다수 시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경제가 ‘실패한 경제’다. 선택을 다시 하고 경제 규칙을 새로 쓰지 않으면 불평등의 굴레를 벗을 수 없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노동자의 임금이 따라 올라가는 게 당연한 규칙이었는데 (레이거노믹스가 가동된) 1980년대부터 그 연관성이 약해졌다. 경제 규칙이 잘못됐기 때문” - 기업들은 단기 성과(이익)에만 집착하고, 금융 산업은 계속된 규제 완화로 ‘투기장’처럼 변하면서 경제 성장의 혜택이 기업 최고경영자와 대형투자은행 등에만 쏠리고 있음.

“불평등 문제를 그냥 놔두면 결국 장기 투자와 일반 근로자 임금은 실질적으로 줄어들어 경제 구조 자체가 부실화한다. 그러면 나라 경제 전체가 약해지고 성장도 되지 않는다”





## VII. 결론

- 한국사회에서 가난은 자기책임 때문만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회내의 불평등 함정(Inequality Trap)을 제거하도록 교육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의 변화를 지지할 필요.
- 사회적 지출이 성장을 저해하기 보다는 소득 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지출확대 동참과 지지.
- 교회에서 이러한 변화를 추동할 수 있도록 미션스프링이 앞장서서 저소득층의 자녀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야
- 전국 교회들이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위한 장학금 확대, 방과후 학교에서 학습지도, 보육원 운영 등으로 체계적인 불평등함정 극복 운동 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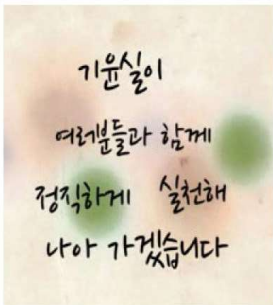


## 참고문헌

- Acemoglu, Daron, James Robinson. 2012.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Crown Business.
- Daymon, Caroline, Celine Gimet. "An empirical test of the inequality trap concept." *Economics Letters*, Vol. 105 No. 2 165p ~ 167p 0165-1765 SCOPUS
- Elekdag, Selim. 2012, "Social Spending in Korea: Can it Foster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IMF WP/12/250* October, IMF, pp. 1-20
- OECD, 2013, *Strengthening Social Cohesion in Korea: Assessment and Recommendation*, preliminary version, pp. 1-26
- Stiglitz, Joseph. 2012. *The Price of Inequality*. Penguin Books.
- 김선태(2014), 한국의 소득불평등 추이와 금융포용 . KB지식비타민 . 2014. 8. 18 (14-64호)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 김희삼(2015),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KDI FOCUS 2015년 4월 29일(통권 제54호)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과 신뢰받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민주화에 대한 열기가 절정을 이루던 1987년 12월, 손봉호, 김인수, 이만열, 장기려, 원호택, 이장규, 강영안 등 함께 성경공부를 하던 기독교인들이 뜻을 모아 시작한 기독교시민운동입니다.

“아무리 정치·경제적으로 발전해도, 도덕적 수준도 낮다면 살만한 좋은 사회가 아니죠. 먼저 우리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사회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는 운동을 펼쳐보자는 뜻에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장규 자문위원(창립발기인)

기윤실은 지난 20여년 간 좋은교사운동, 기독교법가회, 공명선거운동,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놀이미디어교육센터, 크리스천라이프센터, 대한민국교육봉사단 등 **우리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울러, 기윤실은 네트워크운동으로 기독교윤리를 각 지역 현안에 맞게 전개하기 위해 지역기윤실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윤실은 다시 하나님 앞에, 한국 사회 앞에 서서 묻습니다. **‘앞으로 기윤실은 어떤 운동을 펼쳐나갈까?’**

- “**처음 정신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손봉호 자문위원장
- “**하나님의 온전함을 사모하며 온전한 일을 하는 삶으로 나아하겠습니다**” 홍정길 이사장
-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박은조 공동대표
-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백종국 공동대표
- “**교회의 회복은 신앙인다운 결단과 실천을 할 때 시작됩니다**” 임성빈 공동대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함께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입니다. 기윤실이 여러분과 함께 정직하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기윤실 소개영상 바로보기



기윤실 운동은 개인/단체 회원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이뤄집니다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54길 30, 401호 (세대빌딩)

전화 02-794-6200 홈페이지 cemk.org 이메일 cemk@hanmail.net